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

한국인의 이념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88).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국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로 인해, 시민들이 민주주의 작동방식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안정된 체제로서 지속될 수 없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치 경쟁을 규정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선거를 통해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그 정권과 체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곤 한다(Dalton 1999; Diamond 1999; Linz and Stepan 1996; Shin and Shyu 1997).¹⁾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민주적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이 남아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비민주적 집단의 도전을 견제하고 방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Rose et al. 1998).

1) 다이아몬드(Diamond 1999, 66-73)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 이상의 국민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을 지지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국민의 수는 15% 미만일 때,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특히 민주주의 지지(democratic support)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개념이며,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는 태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방향적(multi-directional)이다(홍재우 2006). 예를 들어, 이스턴(Easton 1965; 1975)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포괄적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지지란, 특정 정부, 정책, 지도자, 혹은 특정 시점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그 지도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반면 포괄적 지지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도와 기본 원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구체적 지지와 비교할 때, 포괄적 지지는 특정 정권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이며, 형성되거나 악화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 태도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 포괄적 지지는 높은 반면, 구체적 지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Fuchs et al. 1995; Klingemann 1999).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인의 민주주의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동네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 실제 작동하는 방식이나 개별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영호 외 2013; Park 2011).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단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빠른 민주화 이행을 추동하였지만, 이상에 비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민주적 규범 의식과 잔존하는 권위주의적 유산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Park and Shin 2006; Rose and Shin 2001). 이와 유사하게, 참여주의적인 시민문화와 대의제적인 제도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조영호·김용철 2017)와 합의제적인 문화와 다수제적인 제도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강신구 2019) 또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간의 부조응이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 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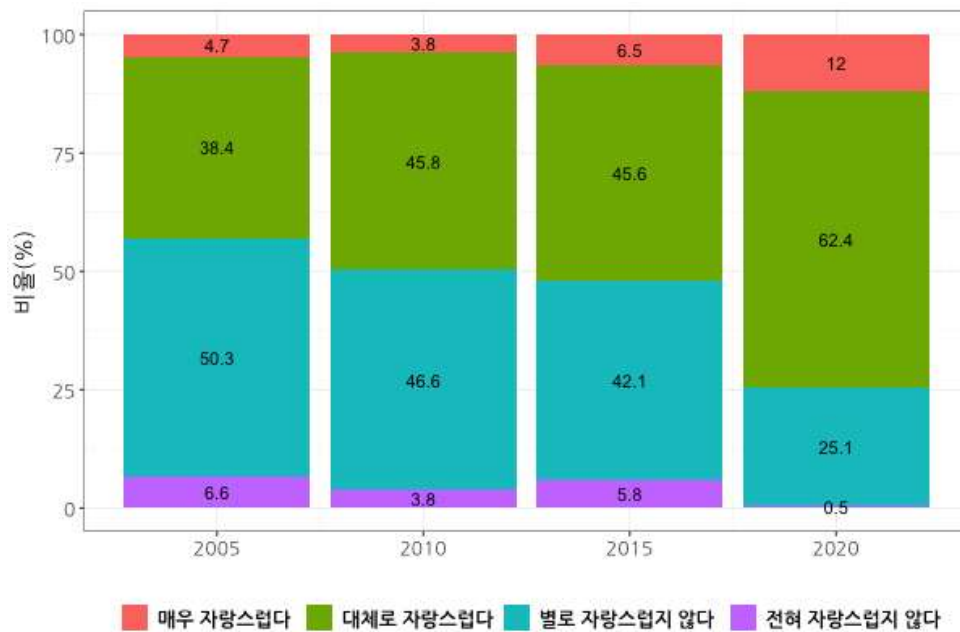
이들 연구는 대체로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를 분석하거나 혹은 특정 시점의 여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인의 민주주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림 1〉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약 43.1%(매우 자랑스럽다 4.7%, 대체로 자랑스럽다 38.4%)의 응답자들의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후, 매 조사마다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2010년 49.6%, 2015년 52.1%를 거쳐, 2020년에는 74.4%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박종민(Park 2011)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가 모두 약화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다른 정치체제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 1996년 65%에서, 1998년 54%, 2001년 45%를 거쳐, 2006년에는 43%로 낮아졌다.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또한 1995년 55%, 1998년 44%, 2001년 47%, 2006년 48% 등을 기록하였다. 조사 문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05년 조사에서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43% 정도임을 고려할 때, 〈그림 1〉은 2005년 이후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태도 변화(2005~2020)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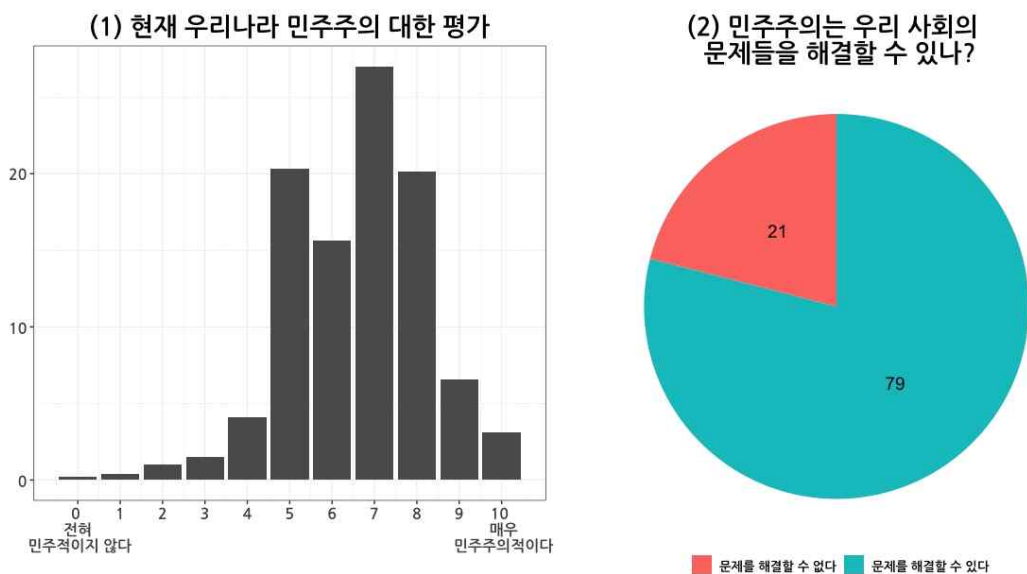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2020년 조사에서 민주주의 태도와 관련하여 새롭게 세 문항을 추가하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반영하는 문항임을 고려하여, 구체적 지지를 묻는 문항 하나와 포괄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두 문항을 새로 포함했다. <그림 2-1>은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를 1에서 10으로 답하는 문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6에서 10으로 평가)는 약 73%,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1에서 4로 평가)는 약 7%이다. <그림 2-2>에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임을 보여준다.

<그림 2>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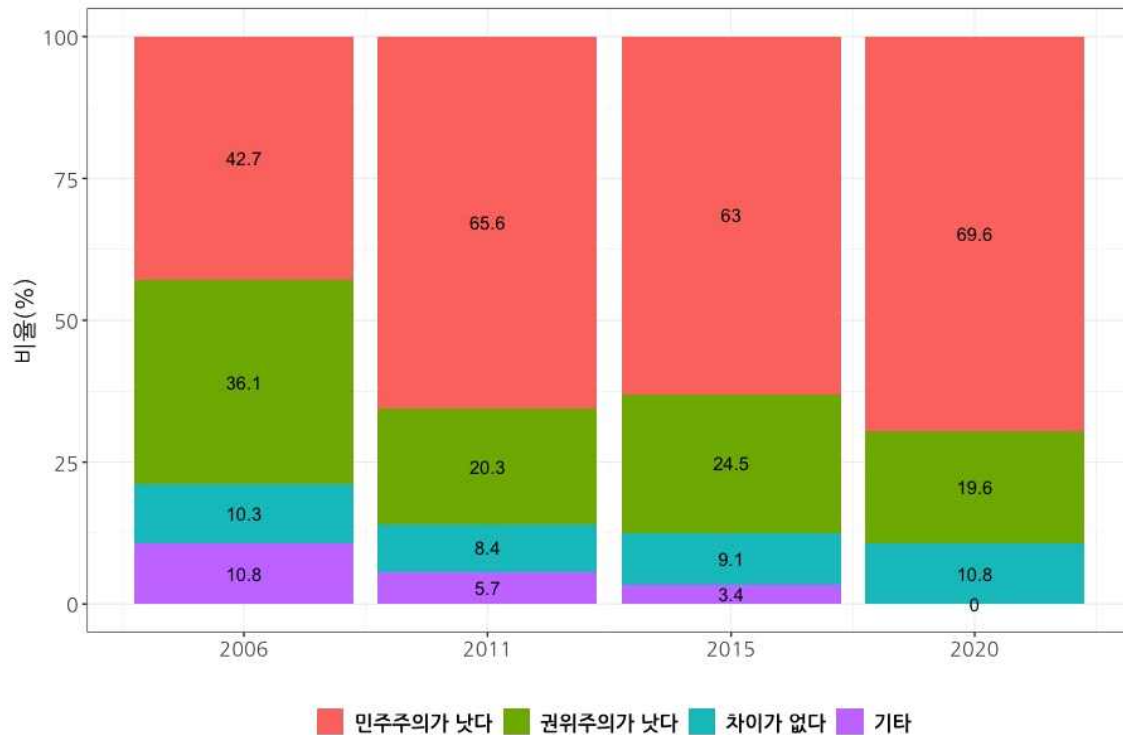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그림 3>은 새로 추가된 문항 중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Asia Barometer의 2006년, 2011년, 2015년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박종민(Park 2011)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언제나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낫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1996년 65%, 1997년 6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에는 43%에 불과했다. 한편, 어떤 상황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가 낫다고 응답한 이는 1996년 1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36%에 달했다. 즉, 2006년의 경우,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들과 권위주의를 선호하는 이들 간의 격차가 6%에 불과했다. <그림 3>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낫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2011년 66%, 2015년 63%를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약 70%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권위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1년 20%, 2016년 25%를 거쳐, 2020년에는 다시 20%를 기록했다.



〈그림 3〉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비교에 대한 선호 변화(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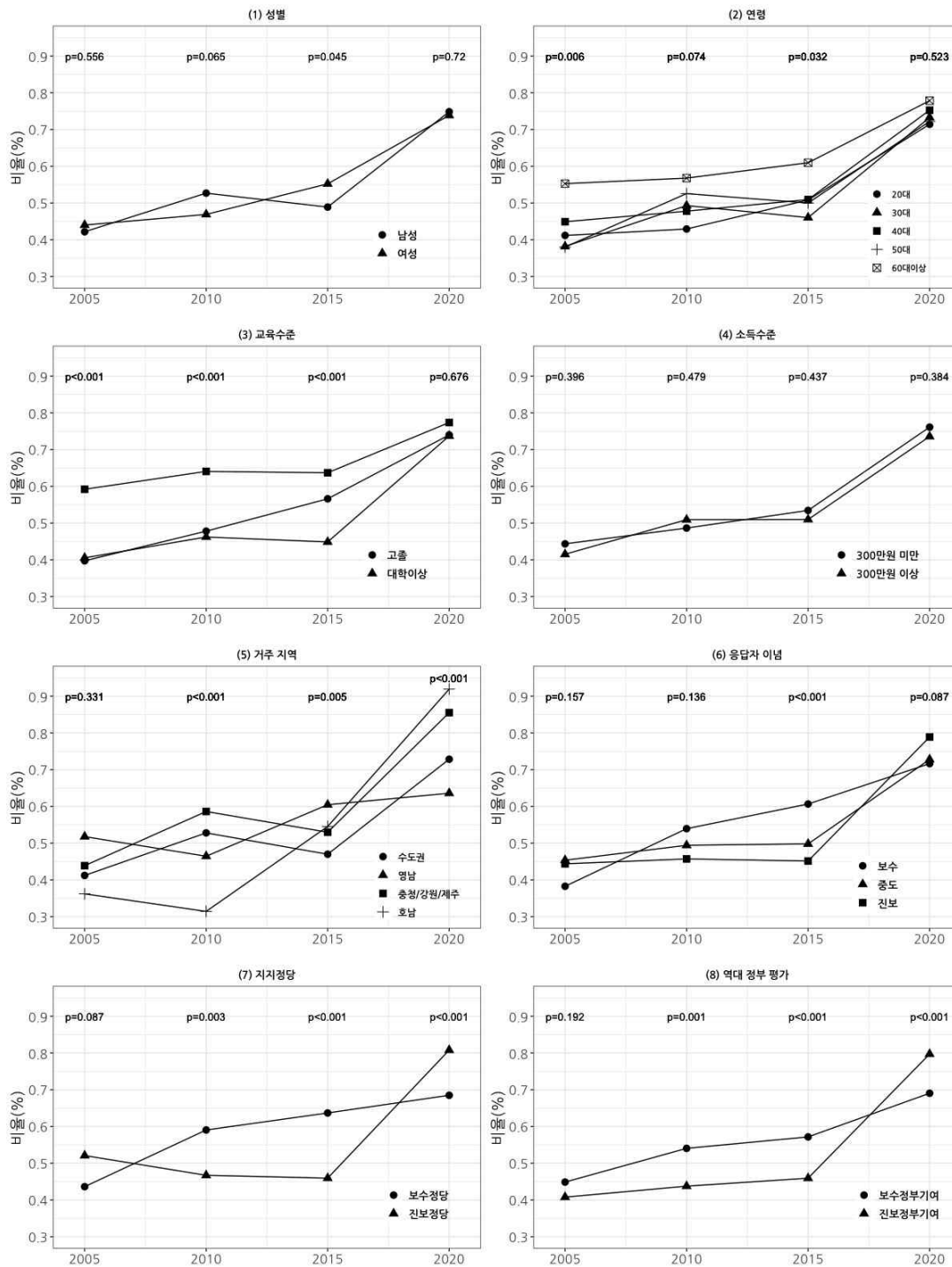
■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2차(2005-2008), 3차(2010-2012), 4차(2014-2016) 조사
<http://www.asianbarometer.org/> (2020.4.19. 접속)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내지만, 실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2020년의 조사 결과에서는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 부조응에 초점을 맞춰 한국민들의 민주주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며, 정치문화 또한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대한 한국민의 평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그림 4〉에서 주요 사회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집단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그림의 상단에 위치한 값들은 성숙도에 대한 평가와 각 해당 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에 따른 p-value를 나타낸다.



〈그림 4〉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대한 주요 사회집단별 평가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그림 4-1>에서, 2005년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남성의 42%, 여성의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남성 중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2010년 53%, 2015년 49%를 거쳐, 2020년에는 75%로 증가했다. 반면 여성 응답자 중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0년 47%, 2015년 55%를 거쳐 2020년에는 74%로 증가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녀 응답자 모두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으나, p-value에서 알 수 있듯이 시기별로 남녀 응답자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는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고 있다. 60대의 경우,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비율이 2005년 55%, 2010년 57%, 2015년 61%를 거쳐 2020년에는 78%로 증가했다. 50대에서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비율이, 2005년 38%, 2010년 53%, 2015년 50%를 거쳐, 2020년에는 72%로 증가했다. 40대에서는 2005년 45%, 2010년 48%, 2015년 51%를 거쳐, 2020년에는 75%가, 30대의 경우에는, 2005년 38%, 2010년 49%, 2015년 46%, 그리고 2020년에는 73%가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20대의 경우, 2005년에는 41%, 2010년 43%, 2015년 51%, 그리고 2020년에는 71%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설문조사의 특성상 연령대에 따른 평균만으로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령집단의 태도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조사에서는 성숙도에 대한 평가가 세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99% 신뢰수준)하여 세대균열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격차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은 교육수준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 교육수준의 보기를 중졸이하, 고졸, 대학이상으로 구분했다. 2005년의 경우, 중졸이하인 응답자들과 고졸 혹은 대학에 진학한 응답자들 간의 태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 59%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고졸 학력을 가진 유권자들과 대학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은 약 40%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64%)와 고졸(48%) 및 대학진학 응답자(46%)들 간의 차이는 2010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5년에는 이전 조사에 비해 고졸 응답자들의 평가가 크게 개선되어 57%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대학진학 응답자 중에서는 여전히 45%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대학진학 응답자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 중 74%가 민주주의 성숙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 77%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졸 이하 응답자들과 불과 1%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카이제



곱 검정에 따르면, 2005, 2010, 2015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4〉는 소득수준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설문조사마다 소득수준 구분이 달라, 서로 다른 시기의 응답들을 비교하기 위해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두 그룹으로만 나눌 수 있었다. 2005년, 300만원 미만 응답자가 44%, 300만원 이상 응답자가 42%를 기록한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 조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20년에는 각각 76%와 74%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득수준의 경우 모든 조사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5〉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영남, 호남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했다. 2005년에는 호남지역 응답자 중 36%만이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영남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52%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체로 호남 유권자가 진보적, 영남 유권자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5년의 결과는 이념성향이 민주주의 성숙도 평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지역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31%와 46% 낮아진 반면, 수도권과 충청/강원/제주 지역에서는 2005년에 비해 상승하여 각각 53%와 59%를 기록했다. 카이제곱 검정은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의 경우, 2005년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호남의 경우 25%, 영남의 경우 14%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소폭 하락하여 47%와 53%를 나타냈다. 지역 간의 전반적인 차이는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는 호남, 수도권, 충청/강원/제주 응답자 중에서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가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호남 응답자의 경우, 2015년에 비해 38% 증가한 92%가, 수도권에서 73%(27% 증가), 충청/강원/제주에서 86%(26% 증가)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영남의 경우, 3% 증가한 64%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은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 중도, 보수로 나뉜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보여준다. 2005년에는 진보성향 응답자 중 44%, 중도성향 응답자 중 45%가 민주주의 성숙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성향 유권자 중에서는 3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의 조사에서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긍정비율이 2010년에는 54%, 2015년에는 61%



로 증가했다. 이는 두 번의 조사에서 각각 46%, 45% 기록한 진보성향 응답자와, 49%와 50%를 기록한 중도성향 응답자와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2020년 조사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지만, 그 증가 폭은 진보성향 응답자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긍정평가 비율이 79%에 달했다. 보수성향 응답자와 중도성향 유권자에서 해당 비율은 각각 72%와 7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념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태도가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2005년이나 2020년의 경우, 보수성향 응답자의 민주주의 평가가 진보나 중도성향 응답자에 비해 좋지 않은 반면, 이후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2010년, 2015년의 경우 보수성향 유권자의 평가가 진보성향 유권자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카이제곱 검정에 따르면, 2015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의 조사에서, 이념성향에 따른 민주주의 성숙도 평가는 통계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자들을 구분할 경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념성향에 대한 답변 또한 집권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조사에서, 자신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21%, 중도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49%,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30%였다. 2020년 조사의 경우,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31%,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은 43%,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은 26%로 나타났다. 5년 만에, 진보는 10% 늘어난 반면, 중도와 보수는 각각 6%와 5%씩 감소한 것이다. 횡단면 조사의 특성상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진보적이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늘어나고,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보수적이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그림 4-7>과 <그림 4-8>은 지지정당과 역대 정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이념적 정체성을 구분하였다. <그림 7>에서 보수정당 지지자는 한나라당(2005, 2010년), 새누리당(2015년), 미래통합당(2020년) 지지자를 포함하고, 진보정당 지지자는 열린우리당(2005년), 민주당(2010, 2020년), 새정치민주연합(2015년) 지지자를 포함한다. 2005년, 진보정당 지지자 중 52%, 보수정당 지지자 중 44%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010년과 2015년에는 보수정당 지지자 중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59%와 64%였으며,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는 47%와 46%로 나타나,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진보정당 지지자와 보수정당 지지자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증가 폭은 진보정당 지지자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진보정당 지지자의 경우 35% 증가한 81%가, 보수정당 지지자의 경우, 5% 증가한 69%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림 4-8>은 역대 정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이념적 정체성을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는 이승만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한국의 정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개 정부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요인1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고, 요인2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 두 요인을 비교하여, 역대 보수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 우호적인 응답자와 역대 진보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 우호적인 유권자로 나누어 민주주의 태도를 평가했다.

2005년 보수정권의 기여가 더 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45%, 진보정권의 기여가 더 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41%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응답했다. 2010년과 2015년에도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응답자들이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10년에는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응답자의 54%가, 2015년에는 57%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평가한 반면, 진보정권에 우호적인 응답자 중에서는 44%와 46%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진보정권에 우호적인 응답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성숙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80%로 나타나, 5년 전과 비교할 때, 약 35% 정도 증가했다. 한편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2015년에 비해 약 12% 증가한 69%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에 따르면, 지지정당에 따른 분석과 유사하게, 2005년 조사에서는 정권에 대한 태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사에서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민주주의 태도의 결정 요인

한국민의 민주주의 태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태도와 포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주주의 태도에 관한 네 문항을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비교한 문항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각 문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첫 번째 요인을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태도로, 두 번째 요인을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문항은 2020년 조사에서만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에는 2020년 조사 결과만 사용했다. 각각의 변수들을 긍정적인 태도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도록 조정했다.

2) 요인적재량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 한국 정치가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비교, 민주주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제1요인의 적재량은 0.68, 0.56, -0.15, 0.05이며, 제2요인의 적재량은 -0.18, 0.08, 0.69, 0.56이다. 두 요인의 Eigenvalue는 각각 1.3과 1.24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앞서 고려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성향, 역대 정부 평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추가로 고려했다.³⁾ 첫째,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는 비교선거제도연구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선거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후 앤더슨과 츠버도바(Anderson and Tverdova 2001), 보울러와 도노반(Bolwer and Donovan 2007)에 따르면 선거에서 승자를 지지했는지, 패자를 지지했는지의 여부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연구로는 조진만 외(2001)가 승자의 정치적 관용이 패자의 정치적 관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19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는가에 따라 변수를 조작화했다.⁴⁾

둘째, 정치적 요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브래튼과 매트(Bratton and Mattes 2001), 메몰리와 퀴란타(Memoli and Quaranta 2018)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경제의 개방도, 경제의 자유와 같은 요인들이 민주주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강우진(Kang 2015)은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복지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경제인식에 대한 태도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달튼(Dalton 2008)은 시민성을 좋은 시민이라면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는 일련의 규범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규범에는 정치참여, 자율성(autonomy),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에 의한 지배의 수용,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민성을 갖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주의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시민성은,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은 없다.’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등의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3)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했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다섯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재학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등 다섯 집단으로 나누었다.

4) 19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 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2, 두 번의 선거 중 한 번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경우 1, 한 번도 지지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간주했다.



주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은 이들 항목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다. 그래햄과 스볼릭(Graham and Svobik 2020)은 정당, 이념, 혹은 정책적 차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때,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 심화된 정당 간의 경쟁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갖는 동질감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정당 지지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를 야기한다. 그 결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약해진다(Hsiao and Yu 2020). 한국인들의 정치적 양극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갈등이나 거리감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표 1〉은 민주주의의 구체적 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1과 모형2는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 모형3과 모형4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 모형5와 모형6은 두 문항에 대한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독립변수의 경우, 결과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연속변수로 간주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20대를, 그리고 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제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했다. 정당지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를, 이념성향의 경우, 중도유권자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했다. 홀수에 해당하는 모형은 인구변수만을 고려하고, 짝수에 해당하는 모형들은 정치, 경제적 태도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민주주의의 구체적 지지에 대한 분석

	민주주의 성숙도		민주주의적인가		구체적 지지	
	(1)	(2)	(3)	(4)	(5)	(6)
남성	0.042 (0.038)	0.047 (0.039)	-0.064 (0.102)	-0.034 (0.101)	0.015 (0.063)	0.025 (0.062)
교육수준	0.003 (0.036)	-0.010 (0.036)	0.064 (0.095)	-0.009 (0.094)	0.018 (0.058)	-0.010 (0.058)
소득수준	-0.003 (0.015)	-0.004 (0.015)	0.014 (0.041)	0.030 (0.040)	0.004 (0.025)	0.006 (0.024)
30대	0.017 (0.065)	-0.004 (0.065)	-0.046 (0.174)	-0.182 (0.172)	-0.018 (0.106)	-0.086 (0.105)
40대	0.071 (0.062)	0.045 (0.064)	0.143 (0.167)	-0.042 (0.167)	0.112 (0.102)	0.031 (0.102)
50대	0.019 (0.063)	-0.002 (0.065)	0.329* (0.169)	0.147 (0.172)	0.119 (0.103)	0.044 (0.105)



60대	0.069 (0.068)	0.047 (0.071)	0.238 (0.181)	0.176 (0.187)	0.129 (0.111)	0.090 (0.115)
호남	0.205*** (0.065)	0.161** (0.067)	0.890*** (0.173)	0.531*** (0.177)	0.491*** (0.106)	0.336*** (0.108)
영남	-0.186*** (0.045)	-0.137*** (0.047)	-0.231* (0.119)	0.027 (0.123)	-0.309*** (0.073)	-0.169** (0.075)
진보후보지지		0.055 (0.057)		0.306** (0.149)		0.155* (0.092)
보수후보지지		0.058 (0.063)		-0.020 (0.166)		0.044 (0.102)
진보성향		0.047 (0.046)		0.359*** (0.122)		0.177** (0.075)
보수성향		0.007 (0.054)		0.406*** (0.143)		0.138 (0.088)
진보정권기여		0.085*** (0.021)		0.341*** (0.056)		0.197*** (0.034)
보수정권기여		0.045** (0.021)		-0.034 (0.056)		0.049 (0.034)
민주당투표		0.025 (0.033)		0.093 (0.088)		0.062 (0.054)
국가경제인식		0.065*** (0.023)		0.050 (0.059)		0.085** (0.037)
시민성		0.000 (0.020)		0.003 (0.052)		-0.027 (0.032)
정치갈등		0.008 (0.019)		-0.064 (0.051)		0.001 (0.031)
Constant	2.827*** (0.108)	2.657*** (0.121)	6.253*** (0.289)	5.875*** (0.318)	-0.109 (0.177)	-0.436** (0.195)
r2	0.036	0.082	0.041	0.127	0.050	0.127
N	1000	979	1001	989	999	978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인구변수만을 고려한 모형1, 모형3, 모형5에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연령은 구체적 지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체적 지지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수도권 및 여타 지역 유권자에 비해 민주주의 성숙도와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영남지역 유권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각 지역 유권자들의 태도를 반영한다. 수도권 유권자들에 비해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현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영남 지역 유권자들은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가 민주주의가 현재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2, 모형4, 모형6에서 정당지지보다는 개인의 이념성향과 역대 정부에 대한



인식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변수의 구성방식을 고려할 때, 진보정당지지와 보수정당지지의 계수는 기타정당 지지자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은 중도성향 응답자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진보정권기여와 보수정권기여의 경우 값이 클수록, 각 정권이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2에서 이념성향이나 정당지지는 현재의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진보성향 유권자, 그리고 진보정권의 정치발전 기여를 높게 평가할수록 현재 한국의 상황이 민주주의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보수정권이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중도성향 유권자들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점수를 분석하는 모형6은 진보성향(정당지지, 개인이념, 역대정부평가) 응답자들이 민주주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는가의 여부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결과가 민주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실제로 투표를 하거나 지지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선거결과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시민성이나 주요정당 간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평가가 현 정부의 업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흥미로운 점은 보수성향 응답자나 보수정당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혹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패배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의 승리가 보수성향 응답자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분석으로 그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21대 총선이 COVID19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정부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진 가운데 치러졌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표 2〉는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1과 2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비교결과를, 모형3과 모형4는 민주주의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 모형5와 모형6은 두 문항의 요인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구성은 <표 1>과 동일하다.

<표 2> 민주주의의 포괄적 지지에 대한 분석

	권위주의 비교		문제해결		포괄적 지지	
	(1)	(2)	(3)	(4)	(5)	(6)
남성	0.044 (0.051)	0.082 (0.051)	-0.011 (0.026)	0.001 (0.026)	0.005 (0.063)	0.053 (0.063)
교육수준	0.056 (0.047)	-0.009 (0.047)	0.018 (0.024)	0.014 (0.024)	0.079 (0.059)	0.016 (0.059)
소득수준	-0.016 (0.020)	-0.003 (0.020)	0.004 (0.010)	0.005 (0.010)	-0.007 (0.025)	0.009 (0.025)
30대	0.127 (0.087)	0.116 (0.087)	0.022 (0.044)	0.023 (0.045)	0.133 (0.108)	0.127 (0.107)
40대	0.082 (0.083)	0.040 (0.084)	0.001 (0.042)	0.005 (0.044)	0.059 (0.103)	0.029 (0.104)
50대	0.111 (0.084)	0.067 (0.086)	0.024 (0.043)	0.029 (0.045)	0.139 (0.104)	0.106 (0.107)
60대	0.187** (0.090)	0.164* (0.094)	0.060 (0.046)	0.068 (0.049)	0.237** (0.112)	0.235** (0.117)
호남	0.298*** (0.086)	0.202** (0.089)	0.123*** (0.044)	0.095** (0.046)	0.415*** (0.107)	0.292*** (0.110)
영남	0.126** (0.059)	0.168*** (0.062)	0.010 (0.030)	0.046 (0.032)	0.168** (0.074)	0.253*** (0.077)
진보후보지지		0.061 (0.075)		0.027 (0.039)		0.100 (0.093)
보수후보지지		0.014 (0.084)		-0.051 (0.043)		-0.081 (0.104)
진보성향		0.007 (0.061)		0.007 (0.032)		0.018 (0.076)
보수성향		0.066 (0.072)		0.044 (0.037)		0.135 (0.089)
진보정권기여		0.122*** (0.028)		0.069*** (0.015)		0.191*** (0.035)
보수정권기여		-0.057** (0.028)		-0.002 (0.015)		-0.065* (0.035)
민주당투표		-0.027 (0.044)		-0.027 (0.023)		-0.071 (0.055)
국가경제인식		0.028 (0.030)		-0.004 (0.015)		0.009 (0.037)
시민성		0.135*** (0.026)		0.005 (0.014)		0.126*** (0.033)
정치갈등		-0.073*** (0.026)		0.007 (0.013)		-0.058* (0.032)
Constant	0.230 (0.144)	0.258 (0.160)	0.704*** (0.073)	0.714*** (0.083)	-0.367** (0.179)	-0.313 (0.199)



r2	0.021	0.092	0.010	0.039	0.023	0.088
N	1001	980	1000	979	999	978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전반적으로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은 민주주의의 포괄적 지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대와 60대의 이러한 차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20대 응답자들에 비해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비롯한 기타지역 응답자와 비교할 때, 호남 지역 유권자와 영남 지역 응답자가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으며, 민주주의의 민주해결 능력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의 평가가 수도권과 기타지역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 모형4, 모형6에서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당에 대한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에 투표했는가의 여부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또한 세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이념성향이나, 정당 지지여부 뿐 아니라, 특정 선거에서의 승패와 경제 상황의 변화를 막론하고,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역대정권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부가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응답자들일수록, 권위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반면, 보수정부가 정치발전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가 나을 수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증가했다. 그러나 보수정부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해결 능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보수정권 중 과반수(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수립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민성은 응답자들이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 고려할 수 있는 일련의 규범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했다. 분석결과는 시민의식의 함양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갈등에 대한 인식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에서 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그 정치사회적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2>의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



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게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고착화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증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켜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최근에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가 출현하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인의 민주주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한국 또한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의 시기에 걸친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박종민(Park 2011)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고, 민주주의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대의제적, 다수제적인 정치제도와 참여적, 합의제적인 정치문화 간의 부조응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과 낮은 만족도 사이의 괴리를 설명해 왔다(강신구 2019; 조영호·김용철 2017).

한국인의 민주주의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는 시기를 분석하거나 혹은 특정 시점의 여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와 포괄적 지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했다.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볼 때,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51%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20년 동일한 문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는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비교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2005년 민주주의가 낫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43%에 불과했으나, 2011년 66%, 2012년 63%를 거쳐 2020년에는 약 70%의 응답자가 권위주의보다 민주



주의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이념 정체성, 특히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의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부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수록,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권위주의와 비교할 때, 민주주의가 낮고, 민주주의가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수정부가 정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반드시 현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서 패배한 집단은 민주주의가 실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COVID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할 때, 보수적인 이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고,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확고함을 보여준다. 본 장의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결과를 대체로 재확인한다. 그러나 보수정부들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과 한국에서 정당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포괄적 측면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진보와 보수 사이의 첨예한 갈등은 원구성을 포함한 입법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일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신구. 2019.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그리고 민주주의 만족감.” 『현대정치연구』 12(1): 71–106.
- 조영호 · 김용철. 2017. “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의 문화적 기반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



- 의를 지지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51(5): 5-28.
- 조영호 · 조진만 · 김용철. 2013.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7(2): 87-105.
- 조진만 · 윤종빈 · 가상준 · 유성진. 2011.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효과.” 『한국정치연구』 20(2): 29-51.
- 홍재우. 2006.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40(1): 25-46.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66-81.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1. “Winners, Losers, and Attitudes about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21-338.
- Asian Barometer Survey. 2차(2005-2008), 3차(2010-2012), 4차(2014-2016) 조사
<http://www.asianbarometer.org/> (2020.4.19. 접속)
- Bowler, Shaun, and Todd Donovan. 2007. “Reasoning about Institutional Change: Winners, Losers and Support for Electoral Reform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3): 455-476.
-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2001. “Support for Democracy in Africa: Intrinsic or Instrument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3): 447-474.
- Dalton, Russell J. 1999.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Edited by Pippa Norris, 57-7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 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1): 76-98.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and Sons.
- .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435-457.
- Fuchs, Dieter, Giovanna Guidorossi, and Palle Svensson. 1995. “Support for the Democratic System.” In *Citizens and the State*. Edited by Hans-Dieter Klingemann and Dieter Fuchs, 323-3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aham, Matthew H., and Milan W. Svolik. 2020. "Democracy in America? Partisanship, Polarization, and the Robustness of Support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2): 392-409.
- Hsiao, Yi-ching, and Eric Chen-hua Yu. 2020. "Polarizati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Democracy: The Case of Taiwa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1-20.
- Inglehart, Ronald. 1988. "The Renaissance of Political Cultu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4): 1203-1230.
- Kang, WooJin. 2015. "Inequality, the Welfare System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6(5): 493-509.
- Klingemann, Hans-Dieter. 1999. "Mapping Political Support in the 1990s: A Global Analysis." In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Edited by Pippa Norris, 31-5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and Shin. 2006.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and its Institutions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6(3): 665-681.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emoli, Vincenzo, and Mario Quaranta. 2019. "Economic Evaluations, Economic Freedom, and Democratic Satisfaction in Af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5(9): 1928-1946.
- Park, Chong-Min. 2011. "Political Discontent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1(2): 391-412.
- Rose, Richard, William Mishler, and Christian Haerpfer. 1998. *Democracy and Its Alternatives: Understanding Post-Communist Societi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ose, Richard, and Doh Chull Shin. 2001. "Democratization Backwards: The Problem of Third-Wave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2): 331-354.
- Shin, Doh Chull, and Huoyan Shyu. 1997. "Public Opinion in New Democracies: Political Ambivalence in South Korea and Taiwan." *Journal of Democracy* 8(3): 109-124.



■ **저자:** **강우창**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예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선거, 정치행동 등이다. 최근 논저로는 "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 공저), "The Liberals Should Pray for Rain: Weather, Opportunity Costs of Voting and Electoral Outcomes in South Korea" (2019), "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r Realignment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2019, 공저) 등이 있다.

■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6) jwseo@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19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 편

“한국인의 이념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979-11-6617-031-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